

SPRi Issue Report

2017.02.17.

트럼프 정부 출범이
국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the Trump Government
on Korea SW Industry

김준연(catchup@spri.kr)
유재홍(jayoo@spri.kr)
강송희(dellabee@spri.kr)
박강민(gangmin.park@spri.kr)
임춘성(forlim@spri.kr)

- 본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제도실장 (catchup@spri.kr, 031-739-7350)

《 Executive Summary 》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 전환하고, 중국 등 주요 대상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한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 제조 분야로 전망되는데 SW의 경우, 직접적인 對美 SW 수출(패키지, IT서비스)은 13억 달러('15년 기준)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통상 마찰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W산업의 경우, 비통상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데, 먼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외국인 취업 비자제한정책은 외국 국적의 SW인력과 해외유학생의 대거 유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인력의 국내 유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로 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과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과 같은 특허소송의 빈발이 예상되어 국내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망중립성 폐지와 같은 통신기업 친화적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의 수준도 국가안보의 명분으로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끝으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 등 4차 혁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ecutive Summary 》

The Trump government launched on Jan. 20th 2017. President Trump, in particular, has argued that a switch from a multilateral approach to bilateral negotiations in terms of foreign trade policy is important. Accordingly, he has created the National Trade Council so that the U.S. can stay competitive against maj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has made hard-line anti-China appointments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rade friction with Korea is likely to occur in the automobile,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sectors, where exports to the U.S.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of Korea's overall exports. In terms of software, however, exports to the U.S. amount to around USD 1.3 billion per year, so trade friction is not expected to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W industry, the non-trade aspect is even more important. First, Trump's Anti-immigration Administrative Order and Foreign Work Visa Restriction Policy are highly likely to induce foreign SW students and overseas students to leave the U.S. These talents should be strategically recruited in Korea. Second, enhanc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xpected to boost the activities of patent trolls. In this case, patent lawsuits such as Samsung-Apple's patent dispute are expected to become more frequent. Third, if telecom-friendly policies such as the abolition of network neutrality become visualiz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affect Korea, and the level of Internet control and data surveillance will be strengthened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Finally,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manufacturing-friendly policies are expected to stimulate the growth of "fourth-revolution" industries, including autonomous cars and the industrial Internet, which are currently taking off.

《 목 차 》

1.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배경	1
2. 트럼프 정권의 특성	2
3. 트럼프의 공약 내용과 정책기조	4
4. 트럼프와 공화당의 통상 정책	7
5. 국내 SW산업에 대한 영향	8
별첨	14

《 Contents 》

1.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Trump regime	1
2. Characteristics of the Trump regime	2
3. Trump’ s pledges and policies	4
4. Trump and Republican Foreign Trade Policies	7
5. Impact of the Trump Government on Korea SW Industry	8
More Resources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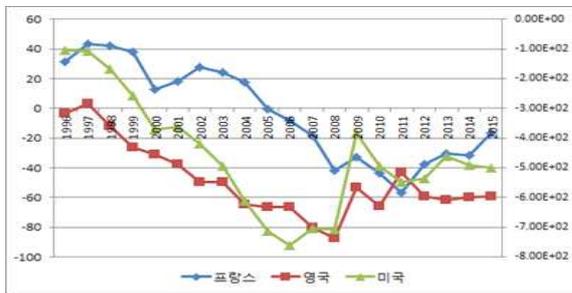
1.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배경

□ '17년 1월 20일 美 대통령에 취임한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대선구호와 함께 당선

○ (미국의 대내외 경제현황) 미, 영, 프랑스 등은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반면, 한국, 중국, 독일은 무역흑자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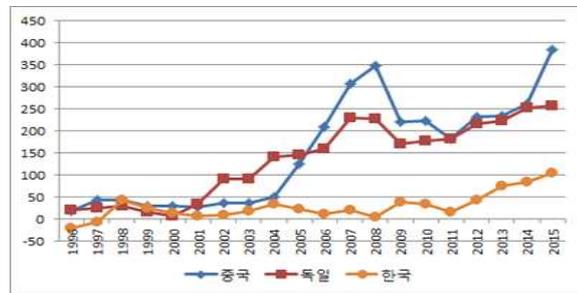
- 한편, 미국은 소득격차 심화·일자리 감소로, 특히 중산층 비중이 레이건 시절¹⁾(80년대) 60%에서 2015년 50%로 감소했고, 인구의 81%가 소득 감소 또는 정체

<무역수지 적자 국가 (미·영·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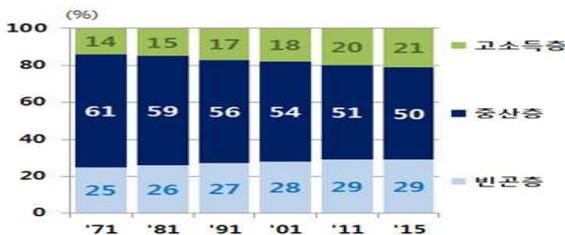
출처 : trade.gov

<무역수지 흑자 국가 (한·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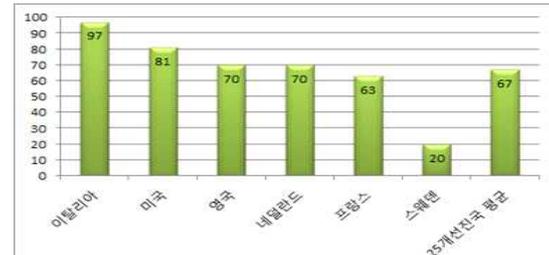
출처 : trade.gov

<미국의 중산층 비중추이(%)>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15)

<소득감소구간에 속하는 인구비중>



출처 : MGI (2016), 2005년~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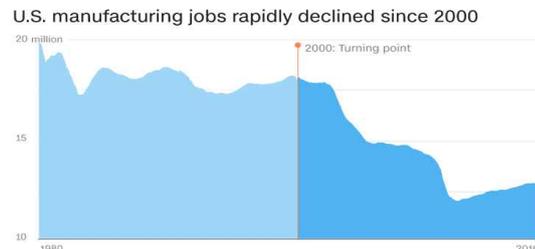
○ (인프라와 제조 일자리) 미국은 공공투자 감소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2000년부터 5백만개)로 자국 내 소득 격차 심화 가속화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 수준>

AVIATION	D	PORTS	C
BRIDGES	C+	PUBLIC PARKS AND RECREATION	C-
DAMS	D	RAIL	C+
DRINKING WATER	D	ROADS	D
ENERGY	D+	SCHOOLS	D
HAZARDOUS WASTE	D	SOLID WASTE	B-
INLAND WATERWAYS	D-	TRANSIT	D
LEVEES	D-	WASTEWATER	D

출처 : 미국토목학회(ASCE, 2013)

<미국의 제조일자리 감소 추이>



출처 : CNN(2016.3)

1) 트럼프는 레이건 시대를 일컫는 강한 미국의 재건을 주장, LA Times, '17.1.20.
<http://www.latimes.com/politics/la-na-pol-trump-inauguration-analysis-20170120-story.html>

2. 트럼프 정권의 특성

□ (트럼프의 성향과 평판) 부동산 기업인으로서 정치 경력은 전무하며,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Rule(규칙)보다 Deal(협상)'을 선호

* 어제의 정치문화를 파괴하고 내일의 정치문화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한,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의 대통령이라는 평가('16.12, Times)

□ (내각의 구성) 트럼프 내각은 전문성을 표방하는 인선이며 기존 관행과 달리 야당(민주당) 인물은 전무하고,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을 지님

- 기업가(엑손모빌)·금융계(골드만삭스, 로스차일드), 군 장성 등 전문성을 가진 공화당 인물로만 인선하였으며, 내셔널리즘적·기업가적·실용주의적 성향을 가짐
- GE, IBM, 테슬라 등 기업 CEO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첫 전략·정책포럼('17.2.3)도 개최

- * GE, GM, 월마트, BCG,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펩시, 보잉, 디즈니, IBM, 테슬라 등
- * 우버 CEO는 지명 후 사용자들의 반발로 사임

<트럼프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



잭 웰치(전 GE CEO)



지니 로메티(IBM CEO)



엘론 머스크(스페이스X·테슬라 CEO)

□ (취임 직후 행보) 오바마 케어²⁾를 '18년까지 폐지·대체하고 TPP³⁾를 즉시 탈퇴하며, 반이민 행정명령과 함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서명하는 등 **반오바마 정책 추진**

* 반이민행정명령('17.1.27) : 7개 이슬람 국가(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국민 및 모든 난민들의 입국금지 명령

2) 오바마 케어(Affordable Healthcare Act) : 건강보험 '의무가입' 과 소득에 따른 적정 보험료 부담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 골자이나, 경제적 자유 침해와 비용(10년간 약 1조 8100억 달러 필요) 관련 비판 여론

3)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데,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력 서비스 관련 자유무역이 강화되었으나 환율조작·노동·환경·지재권 보호 관련 이슈가 있음

< 美 트럼프 정부 내각 인선에 따른 성향과 정책기조('17.2.1, NYTimes)>

구분	구분	비고
<p>국무장관 (렉스 틸러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 및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 엑손모빌(화석연료제조사)에 재직했던 기업가 - 기후변화, 환경정책 등에 비판적 성향 -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p>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해병대 장군('13년 은퇴) -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국 병력(6천명) 증원을 언급 - 이란 정권은 중동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 발언
<p>교통장관 (일레인 차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재개발, 자율주행차 개발·시험 환경 조성 담당 - 로널드 레이건 백악관 펠로우, 조지 W. 부시 대통령 비서직 역임 - 8세에 대만에서 이민한 공화당원으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과 결혼
<p>국토안보부장관 (존 켈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보안, 출입국 관리, 자연 재해, 사이버 보안 담당 - 전 미 남부 사령부 장군으로 2년 전 테러 분자 네트워크와 약물 밀수 조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중남미 수십개 국가의 군대, 법 집행 기관 및 행정 공무원 등과 교류하여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상황을 파악함 - 국경에 대한 위협과 이민에 대한 견해는 트럼프와 일치, 실용주의자
<p>상무장관 (윌버 로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경제 담당 - 역만장자로서 NAFTA 재협상, 중국과 무역 재협정을 주장
<p>내무장관 (라이언 징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에서 은퇴('08년)한 후 몬타나 상원 의원으로 선출 - '14년 몬타나 하원 의원으로 선출 - 이라크에서 3,500명 이상의 특수 작전 요원을 이끌었던 사령관
<p>노동부장관 (앤드류 푸즈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트 푸드 사업가(Hardee's, Carl's Jr.) -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자격 확대는 근로 기회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 - 최저 임금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가 되며 실업을 초래한다고 주장 - 유급 병가 정책을 비판하며 자동화를 지지
<p>법무장관 (제프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 공화당원으로 이민자들이 복지 수당으로 수십억 달러를 쓰고 범죄를 저지르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 - 헌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동성간 결혼은 미국 문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주장 - 마약 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강제적인 처벌을 선호
<p>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eitbart 웹사이트의 편집인이자 트럼프 캠페인의 전략가 - 반유태주의, 인종차별주의, 이슬람 혐오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트럼프의 공약 내용과 정책기조

□ 트럼프의 주요 공약 내용

- **(경제활성화)** 인프라 투자확대, 미국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추진

정책 분야	정책 내용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3.5% 성장 및 잠재성장률 4% - 불법 체류자 추방과 기업의 해외 이전 제한 등을 통한 일자리 회수 - 기업의 법인세 인하, 해외 수익 본국으로 유입, 최저임금제 인상
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인프라 우선(America's Infrastructure First) 정책을 통해 교통, 상수도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등에 대규모 투자 - 유통 물류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건설을 통한 철강산업 회복, 화석연료 수출 촉진

- **(무역정책)** 기체결한 무역협정 재협상, 중국에 대한 보복무역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정책 분야	정책 내용
무역협정 재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NAFTA, 한미FTA 등 기체결 협상 철회 또는 재협상 - 미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무역협상가 임명하고, - 무역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對중국 무역 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일방적 무역보복, 안보상 수입규제 등 무역규제수단 사용 - 중국 45%, 멕시코 35%의 보복관세 부과

- **(에너지 정책)**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생산 확대, 전통 화석 에너지 산업 강화를 통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정책 분야	정책 내용
화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일가스, 천연가스 등 생산규제 완화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찬성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사실상 반대 - 파리 기후변화협약 무효화

○ (세제정책)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세율인하, 상속세, 법인세 폐지 및 인하로 투자 활성화 도모

정책 분야	정책 내용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구간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인하 - 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배당 및 자본이득 세율 20%로 제한 - 상속세, 증여세, 순투자소득세(3%) 등 폐지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 -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제도 폐지 및 해외소득의 미국 반입시 송금세 10% 부과(현재 미국 반입시 법인세율 적용)
현금흐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를 대체하는 미국 기업의 현금 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25%의 세금을 부과 - 투자와 타인자본(부채)에 대해 기준이 변경되고 고정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부여
국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준으로 수출품에 20%의 세금 면제, 수입품에 세금 부과 -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부과

○ (금융산업 및 통화정책) 금융 감독 및 규제를 폐지하면서 산업 강화

정책 분야	정책 내용
금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감독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 제정한 Dodd-Frank Act⁵⁾ 폐지
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앨런 의장의 교체 주장 - 미국 회계 감사원에 연준의 통화정책 및 위원들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

○ (이민 및 복지정책)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추방 및 유입 방지 및 오바마 케어 폐지

* 미국의 불법이민자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이중 멕시코인이 618만명으로 56%를 차지, 주로 음식숙박업, 건설업, 청소 등에 종사

정책 분야	정책 내용
이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접경지역에 거대 장벽 건설,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 이민세관국 산하 불법이민자 추방 TF설치, 비자법 강화 등 -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관리 강화
복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케어 폐지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 낮춤 -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5) 도드 프랭크 법안(2010.7.21. 발효) 시스템 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함

□ **트럼프 행정부의 6대 국정 기조**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6대 국정기조	세부 내용
미국 우선 외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 추진 - 이슬람국가(IS) 및 기타 테러 단체들을 제압하기 위해 자금 지원 차단, 정보 공유 확대
법질서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총기 소지 보장) -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 추방, 경찰 혐오 분위기 조정
미군의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 태세 추구 - 이란 및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 제시 - NAFTA 재협상 거부 시 폐기 의사 통지 -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대응
일자리 창출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해 연 4%의 성장 시대로 복귀 -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OPEC 회원국 및 미국의 이해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 독립 추진 -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기후관련 행동계획 취소

4. 트럼프와 공화당의 통상 정책

□ 트럼프의 통상기조와 조직

- (통상기조) 제조기업의 리쇼어링을 통한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WTO, TPP, NAFTA 등 다자주의적 협정을 양자주의 협상으로 재검토
- (통상조직)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강경파가 입각

조직 구분	책임자	역할과 특성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역할) 대외 무역협상에서 전략자문 (출신) UC Irvine 경제학과 교수 (성향) 중국 견제를 위해 주변국 동맹 강조
상무부	월버 로스	(역할) 무역정책 총괄 (출신) VC(투자자) 출신으로 파산기업의 M&A 전문 (성향) FTA와 NAFTA에 강력한 반대, 對中 강경파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시저	(역할) 통상정책 수립, 집행, 협상, 불공정 무역 조사 (출신) US 철강 고문변호사 (성향) 철강 등 기업계 이익 대변, 보호무역주의자

□ 공화당의 통상정책 기조

-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기조는 트럼프와 상반되나 무역적자 해결과 對중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기조는 동일
- 미국의 통상은 의회비준이 필요, 공화당의 정책기조가 반영될 가능성 높음

□ 트럼프의 통상 현안

구분	역할과 특성
TPP 탈퇴	- '17년 1월 23일 TPP의 탈퇴 서명하여 뉴질랜드(의장국) 전달 (미국이 TPP회원국 GDP의 60%)
NAFTA 재협상	- NAFTA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산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 - WTO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멕시코 대미 의존도 60%)
WTO 탈퇴	- WTO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 - 미국이 주도하는 WTO의 실제 탈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
개별협정 추진	- TPP 탈퇴 후 개별 국가간 FTA 체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한미FTA 재협상	- 현재까지는 미 정부에서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황

5. 국내 SW산업에 대한 영향

< 통상관점 : 영향도 미미 예상 >

□ (국가별 통상현황)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은 중국(-3,561억 달러), 독일 (-711억 달러), 일본(-676억 달러) 순이며, 對한국의 무역수지는 지속적 감소

< 2016년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환율조작국 평가기준) >

구분	무역수지 (200억불)	경상수지 흑자(3%)	GDP의 외환매입율(2%)
중국	3,561억 달러	2.4%	-5.1%
독일	711억 달러	2.4%	-
일본	676억 달러	3.7%	0.0%
한국	302억 달러	7.9%	-1.8%
대만	136억 달러	14.8%	2.5%
스위스	129억 달러	10.0%	9.1%

* 참고 : 대미 무역수지 규모가 200억불을 넘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3%이상 기록하며, 자국 화폐 가치는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GDP 대비 외환순매입이 2%를 넘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 (출처:미국 재무부)

□ (SW관련 통상) 한국의 대미 SW통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통상압력과 마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SW 수입은 약 23억5천만 달러(약 2조 5천억 원)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SW는 12억9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로 수출은 수입의 55% 미만⁶⁾

< 한국의 미국SW 수입 현황 (단위:억달러) >

구분	2011(FTA 이전)	2013(FTA 이후)
SW	14.3	23.5

* 출처 : 미국무역대표부(2015.3), 서비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포함

< 한국의 對美 SW수출 현황 (단위: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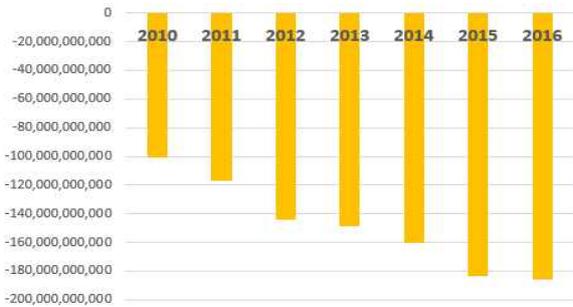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SW	14.2	12.9	-

* SW수출통계조사보고서(SPRi, 2016) : 국내 SW수출기업(패키지SW, IT서비스) 전수 조사 자료(통장입금액 기준)로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포함되며, 인터넷서비스, 디지털콘텐츠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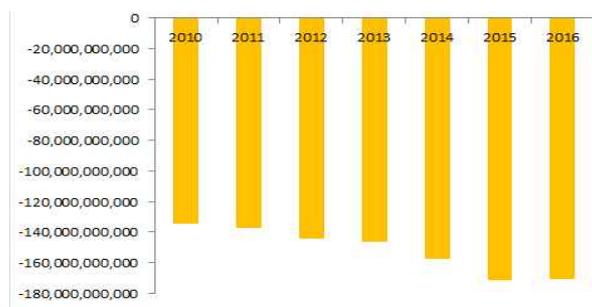
6) 위 도표의 한국의 對美 SW수출입 현황은 통계의 기준이 달라 엄밀한 비교는 어려우며, 수출 통계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를 제외하면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조+SW분야 파급효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정부 보호주의의 기조로 통상교류가 많은 분야별(자동차, 기계 등) 압력 예상
- 융합SW의 관점에서, 자동차·전자·기계 등에 탑재되어 수출되는 국산 SW에도 일정 정도 영향이 예상

<미국 자동차 무역적자 추세>



<미국 컴퓨터·전자제품 무역적자 추세>



출처 : trade.gov

< 한국의 對미 수출 현황 (단위:억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자동차	146.3	177.3	155.9
휴대폰	74.8	66.2	68.3
반도체	28.8	33.1	33.5
일반기계	82.3	78.0	67.8

*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 미래부(2015, 2016), 산자부(2015, 2016)

* 일반기계 : ITC 통계로서 전자 기계를 제외한 일반 기계

< 비통상적 관점 : 이슈별 대응 요구 >

□ SW인력 양성과 유치

- (전문인력) 인재유치를 중시한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과 함께 외국인 고급 인력의 취업 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
 - 공화당 상원의원(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은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인민 개혁법안(RAISE)¹⁰⁾’으로 평균 5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
 - * RAISE : 첫째 현재의 41%, 마지막 회인 10년 후에는 50% 삭감을 목표
 - 미국 97개 IT기업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해외 인재유치가 더 힘들어지고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17.2.6, Techcrunch)
 - * 참여 기업(97개사) : 애플, 에어비앤비, 이베이, 페이스북, 우버, 구글, MS 등

구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외국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비자 조건 완화 등 해외 인력 적극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비자(H1-B) 수 확대(‘16년 8.5만건) • 미국 내 스타트업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최대 5년 체류를 허용하는 규정안(IER) 발표 (2016) • STEM 유학생의 졸업 후 OPT(취업실습훈련)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인력의 취업비자 (H1-B) 발급 제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신청 중 노동 허가 신청 불가 • STEM 유학생의 OPT(취업실습훈련)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 (파급효과) 만약 반이민 행정명령이 유지되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IT인재(한인 유학생 포함)의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지원도 필요
 - 현재 미국 대학생 중 외국 유학생은 약 100만 명이고, 이중 38만 명이 STEM 분야 전공자이며, 한인 유학생은 약 71,719명¹¹⁾(‘15년)이고 이중 STEM 전공자는 21%(약 1만5천명) 수준

10) RAIS(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인민 개혁법안) :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11)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EVP_SBTN_JUL2016.pdf

- Forbes('17.2.6)에 따르면, H-1B 비자 기간 및 대상 축소 방침의 대상은 약 23만 6천 건('16년)으로 파악

< 2016년 H-1B 비자 신청 현황(Forbes, '17.2.6) >

인도 기업(73%)		미국 기업(7%)	
구분	신청 현황	구분	신청 현황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	97,500	Accenture	7,800
Wipro	32,300	Google	2,700
Infosys	25,300	Amazon	2,000
Tata Consultancy	17,600	IBM	1,300

- 이에 따라 인도 IT대표자들은 캐나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 IT 인재를 자국 IT산업 육성에 활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천인계획 발표), 일본(외국인 비자유건 완화)도 해외 인재 유치를 중시

□ 지적재산권 이슈

- (IP 강화) 오바마 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 기조가 트럼프 정부의 양자주의·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인해 더 급진적이 될 것으로 예상

구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지향적인 입장에서 SW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IP보호를 추진했지만,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 • 특허청 내에 PTAB¹²⁾를 두고, 특허 유효성 심사를 효율화하여 특허 출원 지연이 30% 줄었으며 기간도 2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주의 중심의 통상정책강화로 미국에게 유리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미 하원이 Separation of Powers Restoration Act of 2016 법안¹³⁾을 통과시킴에 따라 연방 특허 항소 법원이 PTAB의 결정을 존중하던 기존 방침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출처 : ITIF(2016), 언론자료

- (과급효과) SW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특허괴물에 대해 규제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 같은 사례 재발 가능

12)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오바마 시절 AIA(America Invents Act)의 제정과 공표 이후 특허청 내에 신설된 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둠
 13) Separation of Powers Restoration Act(2016): 항소심이 항소심에 제기된 행정부의 사법적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함

□ 인터넷 및 데이터 정책

- **(통제와 보호)** 오바마는 인터넷 개방과 데이터 공유, 망중립성을 강조했으나, 트럼프는 인터넷 통제권 유지, 사이버 보안·데이터 감시 강화, 망중립성 폐지 추진

구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인터넷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인터넷 정책: ICANN¹⁴⁾의 통제권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이전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NN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반대 • 중국 해커공격에 대한 보호 필요
데이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 등 민간기업에 사용자 정보 비공개를 존중 • 연방정부의 데이터, 공공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에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 •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망중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¹⁵⁾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옹호 정책 등을 펴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의 인터넷 개방 명령을 반대

출처 : ITIF(2016), 언론자료

- **(파급 효과)**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기업과 통신사간에 분쟁 발생이 예상되며, 국내 시장에도 망 중립성 이슈가 재기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검열 등 불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의견도 존재

□ R&D정책의 방향 변화

- **(R&D투자)** 오바마 정부가 미래형 ICT관련 연구를 강조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교통, 에너지, 항만, 상수도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R&D를 강조¹⁹⁾
- **(융합R&D)** 오바마 정부가 의료, 나노, 빅데이터 기술 등을 강조했다면, 트럼프는 전통 제조업의 부흥 정책 추진 전망
 * 부통령 당선자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

14)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지정하는 미국의 비영리 사설 기관

15)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로서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규제 감독하는 행정기관

19) ITIF, Clinton vs. Trump: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구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R&D 및 혁신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R&D를 촉진 • 첨단기술 및 혁신을 강조 • PMI를 통해 정밀의료 산업을 민간과 정부가 통합하여 진행 • NSF iCorps 프로그램 같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예산 별도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연구보다는 효율적 인프라 건설 등 현안 위주로 직접적 투자
융합R&D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Advanced Manufacturing('14), '24년까지 24억불 투자 • (뇌과학) 뇌과학 연구에 \$5억 불 투자 • (소재) \$2억5천만달러 R&D 투자 • (빅데이터) '16.5 전략계획 재수립(NSF), \$2억 투자 • (나노기술) '01년 이후 \$240억 불 • (정밀의학) 초기 연구비 \$200백만 투자 • (컴퓨팅) 2017예산 \$318백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융합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전반적인 공약 제시 없음 • 트럼프 정부는 정밀의학, 생명 과학분야에서도 연구를 주도 하는 국립보건원(NIH)의 비효율적 역할을 비판 • NIH에 대한 구조조정, 보건의료/생명공학의 R&D투자 축소 또는 조정

출처 : ITIF(2016) 외 언론자료 참고

- **(과급효과)**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R&D투자가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예측이 존재하나, 제조업 관련 R&D 투자는 유지 되어 자율 주행 차, 산업인터넷 등 4차 혁명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촉진이 예상

[별첨1] 오바마와 트럼프의 SW산업에 대한 입장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한 브로드계획(NBP) ○ 망중립성 찬성 등 인터넷 서비스 우대 ○ 아이폰 잠금 해제 등 연방수사국과 애플 간 갈등 시 개입 최소화 ○ 국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운송에 1조불 인프라 투자(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 포함) ○ 망 중립성에 반대 등 인터넷 기업보다 통신사 우대 ○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으니 별 필요가 없다는 입장 ○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찬성

[별첨2]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실리콘 벨리 반응

구분	업계 반응	비고
반이민 및 비자개편 행정명령	부정적	- 고급 전문인력 취업비자 축소 가능성이 있음 *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우버,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킥스타터, 깃허브 등은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소원을 법원에 제출 예정 * 팀 쿡(애플),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순다 피차이(구글) 등은 우려감 표명 및 세르게이 브린(구글)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시위 참가
인터넷 망중립성 규제 폐지	부정적	- ISP20)가 넷플릭스 등 트래픽 발생 기업에 대해 인터넷 이용료를 더 많이 부과 가능 - 돈을 더 낸 기업에게 접속 우선순위 및 속도를 높여주는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 -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가능한 불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 가능성이 있음
데이터 감시 강화	부정적	- 테러 방지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더 많이 요청할 것으로 예상
법인세 개혁	긍정적	- 법인세 인하(35%→15%)
자율주행차 개발·시험 환경 조성	긍정적	- 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자율주행차를 개발·시험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입장
긱 경제21) 방식에 노동자 보호 규제 미적용	긍정적	-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의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의 복지를 요구하나, 내각 각료는 복지 제공 강제가 불필요하다 발언
지적재산권 및 자유무역 협정	N/A	-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미국기업에 유리한 무역정책을 펼 것

출처: Economist('17.2), Bloomberg('17.2), Techcrunch('17.2, '16.7), ITIF('16.9), KEIT('17.2)

20)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21) 긱 경제(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별첨3]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내 연구계 의견

구분	총평	상세내용
KT경제경영 연구소	부정적	트럼프대통령 당선자의 ICT정책과 시사점('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ICT수출에 부정적 영향 (한국 ICT수출의 10%('15)가 대미 수출이며, NAFTA, 중국을 통한 우회 대미 수출에도 타격) - 방송/통신 분야 추가 개방 요구 우려 -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격상 -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 강화
KISDI	제한적 영향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산업에 미치는 영향('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 ICT수출 위축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의 감소는 ICT 수출에 미미하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KISTEP	미미한 영향	과학기술&ICT정책기술동향('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로 미국 기업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R&D조세지원, 간접지원 확대와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효과 기대
KIET	부정적	트럼프 경제정책의 예상효과('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기 침체와 무역 위축의 가능성 - 중간재 수출로 중국을 거쳐 대미 수출을 이루는 산업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 - 스마트폰 등의 첨단 기술 산업은 특히 소송에 미국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 타격 - 한미 FTA가 파기되어 관세가 부활하는 경우 문제 초래 가능
KOTRA	新교역 패러다임 필요	글로벌 시장 보고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자유무역주의로 한미 FTA 재협상 추진 가능 - 상품이 아닌 프로젝트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시기 - 미국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부정적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수출에 부정적 파급 효과 -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별첨4] 트럼프 정부 내각 인선

구분	직급	후보	직급	후보	직급	후보	직급	후보
내각인선	부통령	마이클 펜스	국무 장관	렉스 틸러슨	노동부 장관	앤드류 푸즈더	내무 장관	라이언 징케
	재무 장관	스티븐 므누신	국방 장관	제임스 매티스	농무 장관	소니 퍼듀	법무 장관	제프 세션
	상무 장관	월버 로스	주거·도시 개발부 장관	벤 카슨	교육부 장관	베치 디보스	보건복지부 장관	톰 프라이어스
	교통 장관	일레인 차오	국토 안보부 장관	존 켈리	에너지 장관	릭 페리	보훈부	데이비드 설킨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	중소기업청장	린다 맥마흔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룻
	백악관 비서관	레인스 프리버스	UN 대사	니키 헬리	CIA 국장	마이클 폼페오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자문 위원회	GE, GM, 월마트, BCG,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펩시, 보잉, 디즈니, IBM, 테슬라 CEO 등 * 우버 CEO는 지명 후 사용자들의 반발로 사임							

출처 : '17.1.24, ABC News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KT경제경영연구소(2016), 트럼프대통령 당선자의 ICT정책과 시사점
- KISDI(2016),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산업에 미치는 영향
- KISTEP(2016), 과학기술&ICT정책기술동향
- KIET(2016), 글로벌 시장 보고서
- 현대경제연구원(2016),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연구원(2016),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 SPRI(2015),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활동에 관한 연구

2. 국외문헌

- ITIF(2016), Clinton vs. Trump: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ITIF(2016), President-elect Trump' s posi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3. 기타

- New York Times(2017.2)
- Economist(2017.2)
- Bloomberg(2017.2)
- Techcrunch(2017.2, 2016.7)
- ABC News(2017.1.24.)
- The Guardian(2017.2.11.)
- Trade.gov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